

2023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결과 보고



가. 개요

대주제: 한국사회와 정부회계
일 시: 2023년 12월 1일(금) 14:30~16:00
장 소: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
주 최: 한국정부회계학회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한국지방재정공제회

〈주제발표 및 토론〉

[국가회계세션 라운드테이블 토론]
[사회·발표] 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
[토론 1] 임동완 단국대 교수
[토론 2] 배창현 강릉원주대 교수
[토론 3] 이제경 충남대 행정학부 교수
[토론 4] 최서준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
[토론 5] 박규동 광운대 교수

나.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

[주제: 정부회계 연구의 현황과 과제]

● 주요 발표 내용

- (발표: 박성진) 정부회계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제안하고 향후 대안 점검
- 1) 한국정부회계학회가 행정학 전공자와 회계학 전공자가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느냐 실질적인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는가?
 - 행정학 기반: 재정 과정과 재정제도 등에 특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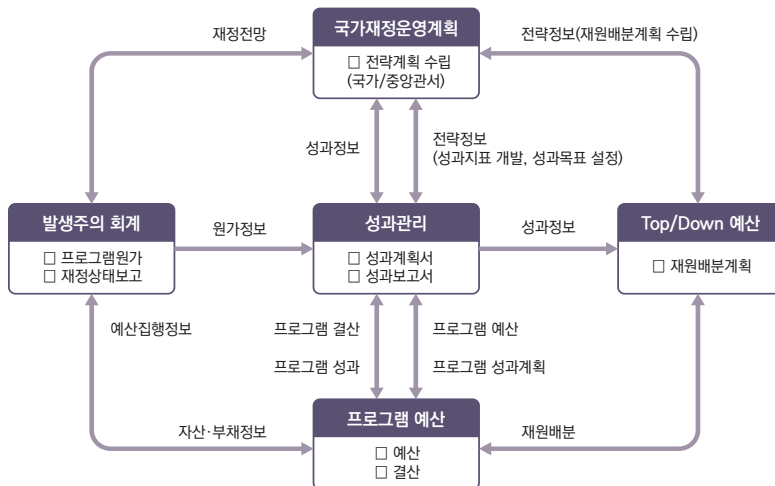
- 회계학 기반: 회계·경영 분야에 특화
- 행정학과 회계학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연구는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하는가?
- 학생들이 배우는 첫 지점인 교과서에서도 행정학과 회계학의 융합지점이 거의 없음

2) 정부회계 연구의 연구논문에 대한 경향성 점검

- 공공부문 일반정부를 포괄하면 실증분석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데, 중앙정부에 대한 연구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
- 이는 근본적으로 자료의 미흡에 기인한 측면이기도 하지만,
- 예산의 편성과 심의 및 집행 등은 관리회계 측면이고, 국가회계와 결산은 재무회계 측면이므로 이 두 회계에서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
-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연구는 많은 논의와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, 아직도 발생주의 회계의 활용은 제한적이므로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필요함

3) 정부회계의 근본적 질문

- ① 우리나라 정부회계는 도입 의도를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? 제도의 성숙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?
 - 정부회계 연구는 가장 먼저 무엇에 답해야 하는가? 어떤 연구부터 해야 하는가?
 - 일반목적재무제표(General-Purpose Financial Statements) 작성을 위해 마련된 회계기준/제도가 정부의 전략적 성과관리와 재정관리에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적절한가?



출처: 기획재정부, 『국가회계제도 개혁 백서』, 2012, p.63

② 우리나라 재정 과정에 있어서의 예산제도와 정부회계의 분절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회계 연구는?

- 문제의 해결/개선을 위한 정부회계 연구 노력이 미비해왔는가?
- 선행연구가 제안하는 정책 대안들과 한계는? 향후 연구에서 주목할 이슈는?
: 예) 사전통제 목적의 현금주의 기반 품목별 예산분류체계가 발생주의 회계정보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연계에 미치는 영향은?
: 예) 재정활동의 stock과 flow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발생주의 회계정보가 다년도 정책사업과 중기재정계획 등에 활용되는 방안은?



③ 기업회계제도에 기반하여 고안된 정부회계제도의 근본적 부정합성은 없는가?

- 기업회계: 경제행위 당사자 간 이루어진 등가물의 (즉, '시장가격'에 맞춘) 자발적 교환거래(exchange transactions)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정보 요구 →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 목적(decision usefulness) → 정보이용자 = (외부)투자자 중심
: 기업에서는 소유/경영이 분리되고 주주/투자자들은 경영성과, 즉 '결과'에 자본투자 또는 회수의 '의사결정'을 함
- 정부회계: 조세 등 비자발적 비교환거래(non-exchange transactions)를 포함하며, 지출을 위한 예산의 편성과 결산이 요구되고, 또 이러한 재정 과정 전반에 관한 책임성(accountability)을 담보하기 위한 정보 제공 → 정보이용자 = 납세자, 공공서비스 수혜자, 정책결정자 및 기타 다양한 (내·외부) 이해관계자를 포함
: 정부운영 또한 주권자와 행정부가 분리되지만 공공서비스 및 정책집행에서는 결과뿐만 아니라 '과정'에서의 책임성 또한 중요함. 이때 책임성의 대상은 누구? 의사결정자는 누구? 의사결정의 대상은 무엇? 국민? 국회? 행정부?

● 주요 토론 내용

토론 1 임동원 단국대학교 교수

1) 예산 과정에 회계정보 반영 필요

- 행정학적 관점에서 보면,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결산보다는 예산 편성과 심의에 관심이 많고, 정부회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과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회계에 관심을 갖거나 회계정보가 예산 과정에 반영되어야 함

2) 선진국의 추정재무제표 작성 및 활용

- 뉴질랜드, 호주, 영국 등의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, 발생주의 회계를 결산과 예산에 활용하고,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함. 호주의 주정부 사례를 보면, 중장기적 부채의 변화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예산에 활용함. 우리나라의 경우 몇몇 기금에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나 그 수준이 높지 않음
- 몇몇 선진국에서는 예산 편성뿐 아니라 심의 시에도 추정재무제표를 활용함. 현금이 아닌 감가상각에 예산을 결정하여 해당 부서가 배정된 예산을 활용하는 등의 자율성의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음
- 뉴질랜드와 호주는 발생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, 급진적인 모델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형태로 정부부문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아이슬란드나 스위스의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
3) 예산, 결산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발생주의 회계정보 활용

- 총액배분·자율편성 예산제도(Top-Down Budgeting)와 프로그램 예·결산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발생주의 회계정보 반영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

4)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규칙으로서 활용

- 발생주의 회계정보 활용에 관한 논문을 찾아보면 대부분 도구로서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많으나, 결정규칙으로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

토론 2 배창현 강릉원주대학교 교수

1) 정부회계 연구는 지방정부와 사례연구 위주로 논의됨

- 정부회계 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살펴보면, 중앙보다는 지방정부, 실증보다는 사례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. 데이터 확보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증분석 연구가 부족한 점이 아쉬움

2) 정부회계 관련 교과목 신설 및 학생들의 연구 참여 필요

- 대학원에서 정부회계 관련 과목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연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 같음
- 연구자 특성을 살펴보면, 학계의 교수나 현장의 공무원들이 주류를 차지하므로, 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박사나 석사과정 학생들의 정부회계 연구 참여가 필요

3) 학회 차원의 연구 성과 확산 필요

- 정부회계 연구 성과들이 지자체와 사례 연구 중점임을 감안하면,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학회 차원에서 연구 수요가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성과 발표 등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
- 학회 연구자들이나 각 기관에서 관심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연구 주제를 결정한 후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

토론 3 이제경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교수

1) 행정학과 회계학 연계의 필요성

- 재무행정론에는 정부예산 외, 재정학과 공공경제학 등 다양한 요소가 추가되어야 하고, 지방채 관련한 재정정책이나 비용편익 분석 등이 정부회계와 아우러져야 함. 발생주의 회계가 중요한 이유는 단기적 시각이 아닌, 중장기 예산에 따른 장기적 국가계획과 재정계획의 일치가 중요하기 때문임
- 일반목적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제도나 기준이 전략적 성과관리와 재정관리에 활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, 행정학자들도 회계가 결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깊은 이해 필요

- 정부회계 연구의 실증 분석을 위해서는 통일된 데이터 소스 등이 필요하며, 관련 실증 분석의 통제변수에는 회계변수뿐 아니라, 사회경제적 변수, 정치적 변수 및 기관별 관리적 변수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행정학과 회계학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
- 재무행정 분야에서는 미래의 예산 혹은 수입 예측과 관련하여 AI를 활용하는 방식 도입을 연구하고 있으므로 정부회계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논의 필요

2) 비용편익 분석 및 지방채 관련 연구 추진 필요

- 비용편익 분석과 지방채 연구는 회계에서 다뤄야 하나 현재 미진하여 학회 특별 호 발간을 통해 정부회계 연구 섹션은 특정 주제나 특정 방법론으로 채워겠다는 합의를 이끌어 추진 필요
- 미국의 경우 수정된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해외 제도와의 비교 분석 연구도 추진 필요

토론 4 최서준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

1) 국방예산의 편성 및 집행

- 국방예산은 방위력 개선사업(무기체계 운영)과 전력운영비(무기체계 운영 제반요건) 등 2개의 회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음. 방위력 개선비는 기획관리체계 하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며, 기획관리체계는 기획, 계획, 예산, 집행, 운영 유지 등의 절차로 운영되고, 각 단계에서 분석 평가를 진행함
- 전력운영비는 역시 기획관리체계로 진행되나, 분석 평가가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 이와 관련한 개선 연구를 추진 중임

2)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정부회계 데이터 활용

-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회계정보를 활용한 분석 평가가 필요하며, 이는 활용도 증진에도 기여할 것임

토론 5 박규동 광운대 교수

- 정책 평가에서 미흡한 부분이 환류이므로 결산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하며, 예산뿐 아니라 결산에서도 단절적 균형 이론을 적용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

토론 6 기타 토론

- 국가회계의 정보 수요자인 국회의원과 예산 결정자들이 국가회계정보를 활용해야 하며,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 충당률을 활용하여 자산 노화율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음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분류 계정과목에 해당하는 데이터 산출 및 공시 필요



국가회계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